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이평래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목차 |

1. 몽골인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보편적 정서
2. 반중 정서의 역사적 배경
3. 체제 전환 이후 대중국 인식의 변화
4. 현재의 몽중 관계와 향후 전망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이평래_한국의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1. 몽골인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보편적 정서

몽골국 또는 몽골인들은 심정적으로 친러반중(親露反中) 성향을 보인다. 몽골인들은 사회주의 시절 소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나, 러시아인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가 할 것 없이 대단히 싫어한다. 러시아인은 소박하지만, 중국인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몽골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다.

네이멍구자치구 오르도스[Ordos, 鄂爾多斯] 출신의 몽골인으로 일본 시즈오카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하이잉(楊海英) 교수의 말이다. 그의 말은 간결하지만,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과 중국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1921년 몽골 혁명 이후 소련 정부가 사실상 몽골을 식민지처럼 관리했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 체제하에서 겪은 경험담 그리고 사회주의 시기의 공포정치와 언론 통제 및 숙청 등 소련과 공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유행병처럼 번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비판과는 반대로 러시아인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는 점이다. 20세기 초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인의 도움이 지대했다는 것부터 개별 러시아인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만일 러시아인들이 없었다면, 레닌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몽골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략) 1921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군이 몽골을 침략했을 때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에 있던 레닌 동상 철거 모습(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 4.0 © Chinneeb)

2012년 가을, 반세기 이상 울란바타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던 레닌 동상의 철거에 즈음하여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에르덴빌릭(D. Erdenebileg, 당시 55세)이라는 운전사가 한 답변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닌 동상은 체제 전환 10년 후인 2012년 10월 14일까지 울란바타르 도심 한가운데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산 체제의 폭정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에게 고마워하는 이중적인 정서가 1990년대 전환기 소비에트 체제와 러시아인에 대한 몽골인의 보편적인 정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의 큰 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몽골인의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한 평가가 이중적이었다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정서는 위협한 중국과 나쁜 중국인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당시 몽골인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호자(khujaa)’라는 말로 상징되었다. 이 말은 원래 한어(漢語) ‘화교(華僑)’에서 온 것으로, 현대몽골어에서 몽골인이 중국인을 비하하여 이르는 단어로 고정되었다. 체제 전환 초창기에 중국인들이 여러 이유로 몽골로 몰려왔을 때 몽골인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쁜 것은 모두 호자 탓으로 돌렸다. 호자가 미우니 호자 나라에서 온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조건 싫어하고 깎아내렸다. 이 호자 범주에는 같은 몽골족인 네이멍구자치구의 몽골인도 포함되었고, 그들은 소위 에를리즈(erliiz, 혼혈아)로 비하되었다. 네이멍구자치구 출신의 몽골인은 반쯤 중국화된 중국의 혼혈아라는 뜻이다. 최근 몽골과 중국 간 교류가 확대되고, 특히 경제 방면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반중국 정서는 크게 해소되었으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기본 정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인식이 이처럼 어그러졌을까? 이것이 큰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약소국의 자기방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반중 정서의 역사적 배경

일반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듯이 역사 속의 몽골과 중국의 관계도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다. 양측의 꺾끄러운 관계는 고대 농경민과 유목민의 관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도발은 농경민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상징이 만리장성이다. 우리 통념 속의 장성은 북방 민족 또는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한 농경민의 방어막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성은 남쪽 농경민들이 초원에서 유목민들을 몰아내고 북방을 통제하고자 쌓은 장벽, 즉 침략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 말이 맞지는 향후 연구로 더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장성 남북의 생태환경을 보면 후자 쪽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만리장성 남북에는 원래 풀이 무성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는 이곳이 유목민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그 초원으로 들어가 농경지를 일구고, 거기에 말뚝을 박고, 인위적으로 성을 축조한 사람들이 농경민이니 침략자는 바로 농경민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농경민이 만든 장성을 사이에 두고 유목민과 농경민은 수천 년 동안 공방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두 집단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갖게 되었다. 예컨대 농경민은 유목민을 중원과 주변국을 침략하는 흉포한 집단이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야만인 또는 문명의 파괴자로 기록했다. 그리고 이는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이래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대표되는, 지난 2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농경민이 갖고 있던 유목민 상(像)의 핵심이 되었다. 반면에 만리장성 북방의 유목민들은 중원의 한인(漢人) 왕조와 대립하면서 세계의 중심에 군림한다는 중국 황제의 중화주의적 주장이나 중국인의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뿌리 깊은 문화적 우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한나라와 흉노(匈奴)의 대립에서 본격화된 두 집단의 대립은 그 후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나눠 가졌다. 원나라 시대(1271-1368) 한인들은 몽골인의 직접적 지배를 받았고, 청나라 시대(1636-1911) 몽골인들은 만청(滿清)의 지배를 받았다. 현재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원나라 시대가 남북 분열을 극복하고 중화 민족을 통합한 위대한 중화왕조로 기술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나라 지배기는 야만인들이 중화 문명을 짓밟은 치욕의 시대로 평가되었다. 청나라 시대에는 한인들이 몽골인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 몽골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대하는 인식의 뿌리가 주로 이 시기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 지배기는 현대 몽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청 지배기 초기에 청 조정에서는 한인들이 만주족의 발상지인 만주와 몽골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른바 봉금정책(封禁政策)이다. 그러나 청 지배기 후기로 갈수록 인위적인 통제 정책은 실효성을 잃었고 한인들은 장성을 넘어 몽골 초원으로 이주했다. 한인들의 이주는 몽골 사회에 여러 문제를 가져왔다. 이주 한인들은 물론 농경민들이었고, 이들은 목초지를 개간하였다. 목초지 개간은 유목민들 생계 터전의 파괴를 의미했고, 이는 농경민과 유목민의 사활을 건 투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현지 지배층과 결탁한 ‘여몽상(旅蒙商)’이라 불린 한인 상인들과 고리대업자들의 수탈로 인하여 유목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면서 양자의 대립은 화해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 결과 몽골 각지에서 반청 및 반봉건 투쟁이 발생했는데, 전자는 만청의 관리 그리고 한인 농민과 상인을 겨냥한 것이고, 후자는 그들과 결탁한 몽골 지배층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자료에는 한인 농민들의 몽골 진출로 인해 목초지를 잃고 방랑한 유목민들과 한인 상인들의 협잡으로 빚더미에 앉은 유목민들의 비참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유목민의 생활 터전을 강탈하는 나쁜 한인(한인 농민), 유목민을 속이는 사악한 한인(한인 상인), 이들을 지원하고 몽골인을 탄압하는 포악한 만청의 관리’라는 인식의 기본 틀이 갖춰졌고, 이러한 인식의 틀이 20세기로 이어졌다.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몽골인들은 그해 12월 1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듬해에 성립된 중화민국이 청나라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몽골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여 몽중 관계가 복잡해졌다. 이때부터 제정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른바 ‘몽고문제(蒙古問題)’를 놓고 밀고 당기는 외교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 후 역대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다가 장제스의 국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몽골의 독립을 수용하였고(1946년 1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소련의 권유로 몽골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1949년 10월 16일). 그러나 신해혁명 직후 성립된 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장제스의 국민 정부, 심지어 마오쩌둥의 신중국 정부까지도 몽골의 독립 승인과는 별개로 몽골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 1956년 중국에서 출간된 지도에 몽골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선 표시가 미정(未定)을 뜻하는 ‘가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 몽골인민공화국과 소련의 국경선은 이정(已定)을 뜻하는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1911년 몽골 혁명 당시의 반중 몽골인들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신장(新疆) 지역의 대규모 반란, 주민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탈 사태 발생,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중소 분쟁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렵게 되자 변계조약(邊界條約, 1962년 12월 26일)을 통해 양국의 오랜 현안이었던 몽중 간 국경 문제를 종결지었다. 이는 외형적으로 몽골의 실질적인 독립을 인정한 것이었고, 그때까지 몽골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여긴 영토를 몽골에 양보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양보는 몽골에 대한 영유권 포기가 아니라 전술적 후퇴였다. 중소 분쟁 속에서 몽골이 소련 쪽으로 기울자, 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몽골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영유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전략적 양보였다. 변계조약 체결 10년 후인 1972년 중국에서 출간된 지도에 여전히 몽골이 중국 영토로 표시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과정에서 몽골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불신은 중소 대립 시기에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몽골이 일방적으로 친소 정책을 견지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몽골이 친소 정책을 고수한 이유는 만청 지배기와 20세기에 걸쳐 고착된 중국의 영토적 지배에 대한 불안과 소련의 정책 때문이었다. 그 당시 소련의 선전 장치는 중국에 관한 모든 것을 양자택일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몽골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의 반중국 정서는 소련 당국에 의하여 치밀하게 기획되었고, 친소 정책을 고수한 몽골 지도자들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장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불신이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까지 이어졌다.

3. 체제 전환 이후 대중국 인식의 변화

1980년대 중반 중소 관계가 개선되자 몽중 역시 관계 개선에 나섰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1989년부터 소련군이 철수하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1994년 신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이해를 강화했다. 그 후 2003년에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의 동반자 관계’, 2011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후 몽중은 2013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중장기 행동전략에 서명하였고,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몽골 방문(2014년 8월 21~22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최고 단계로 격상되었다.

몽골과 중국은 정치 분야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2000년 4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몽중 간 교역은 2018년에 85억 4천만 달러 규모로 20배 이상 늘어났고, 2021년에는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01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

다. 현재 중국은 몽골 제1의 수출 대상국이자 제2의 투자국 그리고 제1의 교역국으로 몽골 경제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對)중국 무역은 몽골의 대외 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무역액 중 대중국 무역액 비중(단위: %)

비중\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1
대중국 무역액 비중	2.3	14.8	34.8	36.4	56.4	62.6	63.1
대중국 수입액 비중	2.7	12.2	20.5	25.8	30.5	36.6	36.8
대중국 수출액 비중	1.7	17.1	51.2	48.2	84.8	83.7	82.1

* 몽골통계청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https://1212.mn/BookLibrary.aspx?category=007>)

그러나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는 몽골의 독립과 주권 및 안보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1990년 이후 양국의 우호 협력이 확대되었으나 몽골국의 현상(status quo)을 부정하는 중국 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잦아졌다. 예컨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1911년 몽골의 독립 선언을 러시아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비판하는 책과 논문이 눈에 띄게 많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필자들은 그때 조국의 영토를 상실했다는 취지를 서슴없이 밝혔다. 이는 종종 외교 문제로 비화했고,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견해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몽골인들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예컨대 몽골의 대표적인 전략 문제 전문가인 하이산다이(L. Khaisandai)는 중국의 경제 진출이 몽골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확장이 몽골에 대한 점진적인 흡수를 목적으로 한다고까지 말했다. 심각한 것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전근대 자국의 속방(屬邦)에 대한 일종의 계승의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것이 쉽사리 교정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다야르 몽골(Dayar Mongol, 汎몽골) 등 극우 민족주의 단체가 출현하여 몽골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계 회사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있는 몽골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즉, 몽골이 군사력과 경제력, 인구 등에서 압도적인 중국에 잠식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극단적인 반중국 행동에 나서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몽골인은 이들 극우단체의 이념과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반중국 정서에 많은 몽골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몽골인의 정서를 의식해서인지 시진핑 주석은 2014년 몽골 방문 때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서도 몽골의 안보를 보장하고 몽골로의 팽창 의도가 없음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몽골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몽골 국민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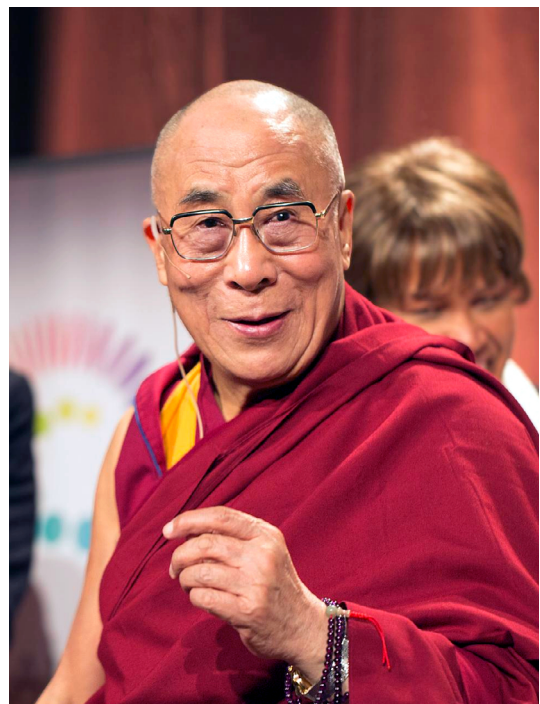
중국의 중단 없는 발전 과정은 세계와 일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발전함으로써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은 몽골국을 포함하여 인접국들에 발전 기회와 발전 공간을 줄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를 중국의 발전 열차에 승차하도록 초대합니다. 열차가 빠르든 느리든 우리는 당신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인접국 수반이 이웃 국가를 방문하여 방문국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에 신경을 쓰고 중국 위협론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명하는 등 대단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는 역으로 몽골인들이 그만큼 중국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년 몽골에서 행해진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언급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전통적 인식이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4. 현재의 몽중 관계와 향후 전망

그렇다고 몽골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마냥 좋아지고 근년 몽중 관계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티베트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2016년 11월 18~23일)을 둘러싼 몽중 간 갈등이다. 달라이라마는 사회주의 시기인 1979년에 처음 몽골을 방문한 이후 모두 여덟 차례 몽골을 방문하였고, 2016년에 아홉 번째로 몽골을 찾았다.

달라이라마의 방문,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과 대몽골 제재, 몽골 정부의 설명과 사과는 그의 몽골 방문 때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6년 말 달라이라마의 방문과 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몽골의 사과는 비난 강도와 사과의 수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자료를 좀 더 찾아 봐야 하겠지만 몽골 정부 당국자 입에서 달라이라



제14대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몽중의 마찰로 이어졌고, 현재 몽골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 2.0 © christopher)

마의 초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몽골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한편으로 몽골 불교 신자들의 염원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전에 몽골 정부는 중국의 국경 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바라는 몽골 국민의 눈치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론도 변했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판샤오취(樊小菊) 박사는 2019년 몽중 수교 70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과 몽골 간 정치 관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치 분야의 공감대가 아직 사회 분야의 공감대로 발전하지 못하여 양국 국민 간 감정에는 여전히 일정한 틈과 오해가 있다”라고 현재의 양국 관계를 진단했다.

몽골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당장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현대 몽골 정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인을 공격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것이 중국과의 관련성이다. 특정 정치인이 중국 정부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집안(친가, 처가, 외가)이 중국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공격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곧 몽골인들 사이에 반중국 정서가 여전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기에는 소련 당국과 몽골 지도자들이 위로부터 반중국 정서를 조장하고 유포시켰다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아래로부터 국민의 반중국 정서를 자신들의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몽골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11년 독립과 민족통합운동의 재검토 - 대몽골국 계승 의식을 중심으로 -」(2023), 「문서자료를 통해 본 하이산의 모습」(2022)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 정책과 제도, 정체성』(2022), 『더 넓은 세계사』(2022) 등 다수의 책을 공동 저술하고, 『몽골의 역사』(2009),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2005) 등 여러 권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이러한 공로로 2023년 9월 10일 몽골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알탄 가다스(북극성) 훈장을 받았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